

# 건설재해 저감 위한 노사민정 협력 필요

## 법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시 엄중 처벌 고령자 재해 다발 업종 집중 관리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2012년과 동일한 0.59%를 기록했다. 2006년 (0.77%) 이후 6년 연속 감소하던 재해율이 주춤하긴 했으나 2012년 사상 처음으로 0.6%대를 돌파한 이후 그 성과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하다. 지난해 연초부터 화학물질 누출, 붕괴 사고 등 대형재해가 빈발하면서 재해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노·사·민·정 모두가 강한 재해예방 의지를 갖고 안전활동을 전개하면서 0.5%대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특히 업종별로 건설업 재해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55세 이상 연령층의 재해자수가 늘어나는 등 안전 관리체계의 부실점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본지는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을 만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을 들어봤다. 취재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

###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



### 건설재해가 증가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08년 이후 건설산업의 영업이익은 매우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공공 건설부문의 최저가낙찰제와 이에 따른 낙찰경쟁까지 치열해 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건설업체의 마진율이 거의 제로 또는 마이너스일 정도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또 건설업 자체의 구조적인 특성도 재해저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도급에 하도급이 만연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여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올 초에 고용노동부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중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종합심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 공공부분에서라도 건설사의 수익구조를 바꿔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하나는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본사에서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조직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하도급 근로자도 관리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위험공정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수시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수시감독,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대규모 현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 중소기업도 현장을 대상으로는 기술 지도,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체에 대한 접근법과 현장에 대한 접근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된다면 올해는 전년 대비 30% 정도 재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도 자체는 현장에 정착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 운영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업체가 난립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일회성으로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올해 12월부터 3억 미만 현장까지 제도 시행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우선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재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고용증가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5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사실 고령근로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적응력이 낮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 조금 힘들어도 묵묵히 업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 발생 비율이 급증했다고 봅니다. 이에 앞으로 정부에

서는 고령근로자 재해가 급증하는 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고령근로자가 많이 배치된 업종, 업체 등에 대해 전담관리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산업재해 저감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중대화화사고 예방대책’, ‘화학물질안전관리 종합대책’,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 등을 통해 안전관리 위기 사업장을 특별관리하고, 원청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위험업종 별로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하고, 이크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등 안전문화 운동도 적극 전개했습니다.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 유도한 것이지요. 하지만 안전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에 노사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고,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언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가 각 사업장에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분명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재해율을 목표로 삼는 것에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재해율은 은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지표로 삼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사망만인율, 특히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목표는 수치적으로는 2017년까지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0.4이하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봐도 산재예방 선진국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최종목표는 OECD 선진국 수준의 산재예방 수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